



Online Series

2014. 12. 31. | CO 14-22

북·러 관계 전망

현승수(국제전략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014년 북·러 관계 회고: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 속 관계 밀착

2014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2012년 5월 푸틴 대통령의 집권 3기가 시작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북러 관계 강화 움직임은 2014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며 동북아와 한반도에 새롭게 ‘러시아 팩터’를 추가했다.

1991년 소연방의 해체 이후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의 후원국이 아니었다. 전임 대통령인 엘친과 달리 푸틴은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어느 정도 공을 들였지만 북러 양국의 무역 규모가 연 1억 달러(2013년 통계)로까지 축소될 정도로 러시아에게 있어서 북한은 큰 매력을 지닌 나라가 아니었다. 더욱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북한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극히 최근까지 러시아가 북한을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북한으로서도 러시아 대신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원국을 얻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관계 회복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양국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푸틴 집권 3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으며 그것은 푸틴이 천명한 ‘신동방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2000년 출범한 푸틴 정권은 서방과의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면서 서서히 아시아로 협력의 눈길을 옮겨 왔으며 2012년 집권 3기와 더불어 천명한 ‘신동방정책’은 아시아 중시라는 러시아의 외교 노선을 개념화한 것이었다.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낙후된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을 골자로 한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2014년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확대를 계기로 한반도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평가된다.

물론 러시아의 대북 관계 강화에는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과 그에 따른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 전략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푸틴 정권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남북러 삼각 경협을 통해 극동 개발을 가속화시키고자 하며 남북한 관계가 냉각된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 남한의 투자와 관심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2014년에는 러시아 못지않게 북한의 대러 접근도 가시적이었다. 북한은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어 새로운 후원자가 필요했을 것으로 분석된다.¹⁾ 우선 양국 간 고위급 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2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으며 10월에는 리수용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11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푸틴 대통령을 접견했다. 특히 최룡해는 푸틴에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접견 다음날인 11월 19일, 푸틴 대통령은 “북러 간 정치·통상·경제 협력 심화가 양국의 국익은 물론 지역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1) 북한의 대러 접근은 북중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북중 무역은 2013년 65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이후 양국 무역액이 연 평균 40% 씩 증가한 결과다. 또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던 원유를 중단시켰다는 일각의 정보는 사실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매년 50만 톤의 원유를 제공하고 있는 압록강 송유관이 여전히 가동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森永輔, “北朝鮮が日米韓口と関係改善を目指す理由,” 『日経ビジネスオンライン』, 2014년 12월 18일, <<http://business.nikkeibp.co.jp/article/interview/20141215/275211/?P=2&rt=ocnt>> (검색일: 2014.12.22).

것이다. 더 나아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1월 20일 “러시아와 북한은 양측이 합의한 시기에 정상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해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북핵을 논의하는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2005년 9월, 6자회담 참가국의 공동성명에 기초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북한 측 입장을 대변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2015년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 예정인 대조국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행사에 초청받은 것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12월 17일 전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 보도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실장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초청장을 보냈다”고 확인했다. 이보다 조금 앞선 11월 25일 조선중앙통신은 최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 결과 보고를 인용 보도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70주년을 기념하게 될 2015년에 러시아와 북한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²⁾

한편 2014년은 지지부진하던 북·러 간 경제 협력 관계를 회복할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도출된 해였다. 5월 5일, 푸틴 대통령은 대북 관계의 걸림돌이었던 북한의 채무(약 110억 달러)를 과감하게 탕감해주는 문서에 서명했다. 남은 채무(약 10억 9천만 달러)는 러시아가 북한의 보건과 교육, 에너지 분야에 재투자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샬로프 러시아 재무차관은 상환금 중 일부는 남·북러를 연결하는 천연가스관이나 철도 연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러시아의 크림 합병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이며,³⁾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대리 부채를 탕감해 준 것은 이에 대한 보답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는 6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한 북·러 제6차 ‘정부 간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위원회’에서 양국 간 무역을 루블화로 결제하는 데 합의하는 한편,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나진항에 보조 선박 지원 등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취했다.

2) “푸틴 대통령 공보실장 ‘김정은 내년 방러 가능,’” 『러시아의 소리』, 2014년 12월 19일, <http://korean.ruvr.ru/news/2014_12_19/281493519> (검색일: 2014.12.22).

3) Gregory Toloraya, “Russia-North Korea Economic Ties Gain Traction,” *38 North*, <<http://38north.org/2014/11/toloraya110614/>> (검색일: 2014.12.22).

2014년 10월에는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3,500km에 달하는 북한 철도 구간을 개보수하는 이른바 ‘포베다’(러시아어로 승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 프로젝트는 러시아 토목업체인 ‘모스토비크’가 참여하며 250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비용은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의 지하 자원을 개발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러시아와의 농업 개발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12월 23일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상지원을 약속한 식량 5만 톤 가운데 밀가루 2만 2천 9백 톤이 남포항에 도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2014년 들어 러시아의 북한 입장 옹호가 눈에 띠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는 인권 문제 등으로 북한에 대해 가중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관련,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스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마서방 간 갈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북한 정권과의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2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미국 측의 비난과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순탄치 않은 한반도에 긴장만 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북한 지도자의 살인기도를 희화한 ‘인터뷰’ 영화 자체가 다분히 공격적 이슈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북한 측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한다고도 밝혔다.⁴⁾

2015년 북·러 관계 전망: 경제 협력 중심의 러시아 팩터 강화

2015년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제스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방의 경제 제재와 국제 유가 하락, 루블화 폭락으로 위기에 직면한 러시아로서는 2015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서방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확보한 전략적 자원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4) “북한을 상대로 미국의 비난과 협박, 한반도 긴장만 심화시킬 뿐 (러시아 외무부),” 『러시아의 소리』, 2014년 12월 26일, <http://korean.ruvr.ru/news/2014_12_26/281715743> (검색일: 2014.12.27).

역시 국제적 고립 국면 타개를 위해 러시아와의 정치경제 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5년 북러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러시아는 지지부진한 남한의 대러 투자 및 극동 개발 참여에 대한 자극제로서 북한을 남북러 3각 경제협력 구도로 끌어들이고자 시도해 왔으며 이 같은 전략은 2015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우리 정부의 ‘동북아평화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원칙적 지지를 표시하면서, 이들 구상의 실현을 위해 한국이 남북러 경협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⁵⁾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남북러 3각 경협을 통해 한반도 협력 구도를 조성하는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평화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제 이익도 챙기고 동시에 안보적 개입도 가능해진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감, 순탄치 않을 러시아의 경제 전망,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프로젝트, 그에 따른 한국과 일본 등 경협 기대국의 투자 미비 등은 2015년에도 해소되지 못한 채,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협력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미 합의되어 추진 중에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협 프로젝트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격적으로 합의한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을 주도하기로 되어 있던 러시아 건설대기업 ‘모스토비크’의 파산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⁶⁾

둘째, 서방,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에 달해 있는 러시아로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실험대가 북한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반미, 반서구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국과 북한을 자기세로 끌어들이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북핵 문제의 발단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한-미 동맹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5) 2014년 연말에 러시아 정부가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11월 27-28일)과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12월 8-9일)를 한국으로 보내 한국이 남북러 경협과 극동 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 것은 러시아 측이 삼각 경협을 북한 팩터와 연계시키고 있는 한국 측 입장에 조바심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북한이 3각 경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북 불신으로 인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Екатерина Нерозникова, “Приезд Ким Чен Ына в Россию может расстроить США,” *Деловая газета «Взгляд»*, December 20, 2014, <<http://vz.ru/world/2014/12/20/721402.html>> (검색일: 2014.12.26).

6) 모스토비크의 올레그 쉬쇼프 사장은 2014년 11월, 임금 미지불과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구금됐다.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러시아의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러시아에게 한국과의 협력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2015년 최대 이벤트는 김정은과 푸틴 간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지, 또 그 기회를 이용해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회담의 방식이 김정은과 푸틴의 모스크바 상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 김정일과 푸틴, 김정일과 메드베데프의 만남 때처럼 울란우데나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내 제2의 장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혹 2015년 아베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 푸틴이 일본을 방문한다면 그 도상에서 평양 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공히 독재자로 비난받고 있는 북러 정상이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고 회담에 나선다 해도 상징적 의미 이상의 성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에게 북한이 줄 수 있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치는 있겠지만 전폭적인 협력 파트너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과 옛 소련권역, 중동 등지에서 외교적 난제를 떠안고 있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북한은 외교적 순위가 여전히 낮으며,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최선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2015년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가 한국을 견제하거나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해 극동 지역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책을 지속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일종의 견제책으로서 사안에 따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스처를 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극동 개발이 절실한 러시아에게는 북한 이상으로 한국과의 실용주의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남북 관계 개선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러시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KINU 201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